

전당 쪼개기·위원회 격하... 정권 입맛대로 '난도질'

尹 정권 문제부도 '광주 지우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심장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향해 전방위적인 '축소·분리'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의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려는 입법예고안을 내놓고 또 운영 주체를 떼어내려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운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5·18 정신을 문화전당에서 도려내고 국책사업으로서의 무게감을 떨어내려는 문체부의 집요한 '광주 지우기'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조성사업 관련 국비 예산(최종 확정액 기준)은 2023년 513억 7700만 원에서 2025년 172억5400만 원으로 2년 만에 66% 이상 급감했다.

이는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이후 편성된 예산안들이 본격 적용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 기조가 유지됐던 2022년과 2023년 예산은 각각 444억4300만 원, 513억7700만 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한 2024년에는 220억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고, 2025년에는 172억5400만 원까지 추락했다. 특히 2025년 예산은 국회 증액조차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의 방어막마저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 삭감은 공장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 2022년 41건에 달했던 지원 사업 수는 2023년 37건, 2024년 26건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고작 14건에 그쳤다. 불과 3년 만에 사업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른 셈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참사'의 원인을 조성위원회의 '장기 표류'와 '위상 격하 시도'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조성위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기획재정부의 예산 갈질을 막아낼 방패막이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조성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넘겼다. 광주시와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실무기구로 전락할 경우 "문체부 및 기재부 예산안 반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결국 예산 삭감은 위원회 힘 빼기의 예고편이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예산 확대'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체부 일각에서는 복원이 마무리되는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을 ACC에

문화전당 운영 효율화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축소·분리' 공세

예산 삭감에 민평원 분리 시도까지

조성위원회 위상 정상화 시급

서 분리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예산으로 목을 조르고, 조직은 쪼개는 전형적인 '고사 작전'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체부의 이러한 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운영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평화교류원의 분리 운영을 꾀한 바 있다.

최근 문체부는 ACC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을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을 ACC라는 문화예술 창작·교류 공간에서 분리해 단순한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광주시민사회의 지적이다.

ACC는 5·18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아시아, 나아가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에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그 정신적 뿌리에 해당하는지 이를 떼어내 행안부 등 타 부처로 넘기겠다는 발상은 5·18을 '박제된 과거'로 가두고, ACC를 '영혼 없는 문화센터'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행태는 '내란 정권'으로 규정된 윤석열 전 정부의 광주 확대 기조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

문체부의 논리대로라면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아니라, 정부 조직 슬립화의 대상일 뿐이다.

조성위 격하와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는 전당의 컨트롤타워(조성위)의 지위를 낮추고 민주평화교류원을 도려내어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변화가 확정될 경우, 2031년까지 예정된 조성사업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문체부가 기계적 효율성을 앞세워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잠재력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이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성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옛 전남도청 분리론에 대해서는 "5·18 정신을 문화전당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쫓수 격하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위원회부터 정상화해 쪼그라든 예산과 조직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이해찬 수석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다짐, 함께 부르는 평화' 대합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계엄 1년' 국민 속으로...장외 행사서 "국민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

현직 국가원수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 현장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해 헌정 위기 상황을 막아낸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민주권주의'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

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함께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낸 위대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인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경호 문제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행사 취지에 맞춰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고 비상계엄 극복 과정과 한 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원석국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대통령과 발을 맞춘다. 김 총리는 이날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 등 산적한 일정을 소화한 뒤 시민대행진 행사에 합류한다. 김 총리는 오후 일정 중 진여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과의 인터뷰도 예정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 문 활짝 열어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지하면 언제든 반드시 재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정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빛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

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민국인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갈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애길 하고 있지 않으나"고 핵무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액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중식 제공,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